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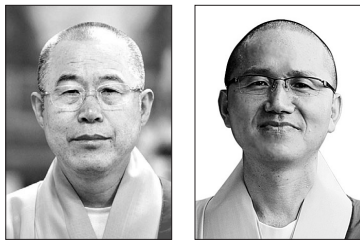
종합단신

천태종 새 집행부 부장인사 단행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 총무 월도 스님 등 유임

천태종 제17대 집행부 부장 인사와 일부 사찰 인사가 31일 단행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3월 31일 오전 총무부장 월도 스님을 비롯해 교무부장 경혜 스님, 재무부장 월중 스님을 유임한데 이어 교육부장에 장호 스님, 사회부장에 설혜 스님, 규정부장에 용문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춘광 스님

월도 스님

천태종은 또 서울 관문사 주지에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부주지에 월도 스님(총무부장), 울산 정광사 주지에 용문 스님(규정부장), 밀양 삼양사 주지에 행주 스님(감사위원), 금산 삼덕사 주지에 구화 스님을 임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제45차 원로회의 열린다

오는 4월 9일... 신임 원로의원 선출 등 다뤄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5차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임직한 무진장 스님의 후임 원로의원 선출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중앙총회는 지난 3월 20일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신임 원로의원에 평택 만기사 주지 원경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경 스님은 1960년 용화사에서 사미계, 1963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흥왕사, 청룡사, 신륵사 주지, 경기도 지방경찰청 경승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2교구본사 용주사 말사 만기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티베트 난민 민수 귀화 불허 철회”

조계종 노동위, 4월 3일 비판 성명 발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노동위)가 네팔 국적 티베트 난민 라마 다와 파상(38, 한국이름 민수)의 귀화 요청을 법무부가 불허한 것에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위는 4월 3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사유는 ‘품행 미단정’. 2011년 민수 씨는 만삭의 한국인 아내와 명동 성당 앞에서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 ‘포탈라 레스토랑’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몰리자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현재 법에는 200만 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됐을 경우 이를 ‘품행 미단정’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는 “민수 씨는 한국에 들어와 25년을 살면서 한국인 부인과 결혼해 아이를 셋을 낳았다. 힘없는 이주민을 흉악 범죄도 아닌 생존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벌금 500만원 문제로 귀화를 불허하는 응징한 처사”라면서 “탄압과 추방을 앞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정착과 융화를 생각하는 발상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 200만원 이상을 품행 미단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2012년 ‘귀화 과정에 차별이 없도록 품행 단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던 그 조항”이라며 “이주민들에게 관용을 넘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未完 그친 ‘94 개혁’... 직선제 도입 시급”

고산문화재단, 3일 조계종 개혁 20주년 포럼 개최

1994년 일어난 조계종 종단 개혁은 현재 종단 전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근간이다. 개혁회의가 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워 개혁을 성공했지만, 승풍 실추 사건은 여전하고 총무원장 선거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1994년의 종단 개혁 정신이 현재에도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됐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은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994년 조계종 개혁 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94년 개혁정신으로 종단의 현재를 본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요 발제자들은 1994년 종단 개혁의 주요 성과들이 미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청정승가 구현’ 부문에 대해 발제한 김형남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1994년 조계종 개혁이 출제자가 함께 하는 집단 지성의 출발점이 되고 분규와 이권 다툼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승려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면서 “거의 2년마다 승풍실추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마다 형식상 자정 기능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 활동의 99%가 정치이고 거래인 현실에서 정치적 의도와 성격에 갖은 자정 기구

는 자정활동의 정치화라는 역기능만 낳았다”며 “종단 정치를 견제하는 비정치적인 자정기능만이 ‘청정승가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부문에 대해 발제한 유응오 삼화도량 사무국장은 △교구총회 설치 △총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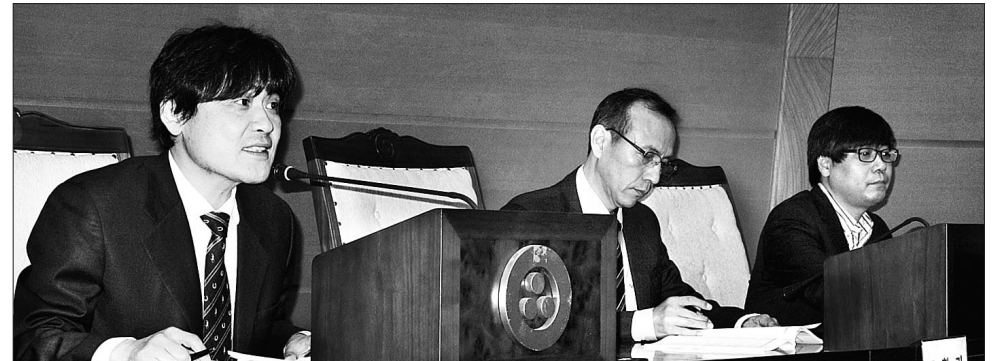
청정승가 구현·민주화 등 주요 성과 ‘절반의 성공’

“대중 소외 현상 심각 수준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필요”

발제자들 ‘한 목소리’ 주장

장, 종회의원 등 주요 소임자에 대한 경직 금지 조항 마련 △지역사찰법 제정과 특별분담금 사찰 지정 등은 개혁회의의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비구니 참종권 확대가 좌절되고 감사처 신설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종헌에 ‘사찰 재정 공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봤다.

유 국장은 “개혁회의가 아쉽게 다룬 시대



고산문화재단은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994년 조계종 개혁 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과제인 민주화에 대한 의제들은 절반의 성과 마냥 거둔채 중단됐다”면서 “그 원인은 이상과 현실이, 승가 전통과 사회 현상이 합치 않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회의 안건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발제자들은 종단의 자정 기능이 정상화되고 민주화의 기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화합승단을 목표로 하는 불교에서 대중소외의 현상이 심해지고 이를 틈타 각종 악습과 승풍문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러한 대중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 대중들의 의사와 청정교단의 요구가 결집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응오 국장은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 조사에 따르면 ‘일정 승랍 이상 직선제’가 가장 높은 호응을 보였다. 현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종도들은 여전히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에 대해 발제한 김중구 교단자정센터 원장 역시 “1994년 종단 개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직선제는 불교의 대중공사와도 부합하며 급권, 파벌 선거 등을 적절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 조환기 前 동명대 교수는 불교 관련 법령 제정등을 통한 자주화의 현실을 살폈으며, 윤남진 NGO리서치 대표는 역대 총무원장 공과를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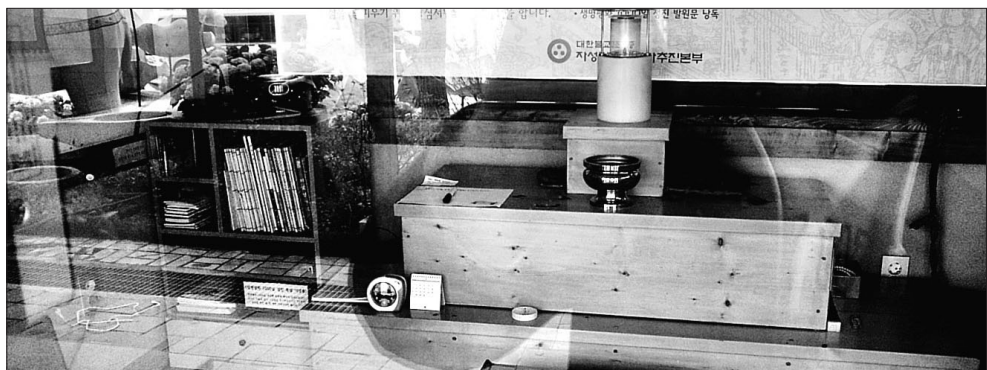
조계종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재가자만 하나?

3월 정진한 스님 6명에 불과 대부분 국장급, 부실장은 ‘全無’

삼화도량 ‘쇄신 재검토’ 주장에도

4월 2일 오후 3시 정진단은 비어

결사추진본부 “비워어도 정진했다”



4월 2일 오후 3시 조계사 일주문 앞의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 내부 모습. 정진 일정이 잡혀 있지만 비어있다. 3월 한달 동안 1000일 정진 동참자를 살핀 결과 대부분 재가자였다. 정진에 동참한 스님은 6명뿐이었으며, 5명이 중앙총무기관 국장급 스님이었다. 부실장 스님들의 동참은 전무했다.

봉축 주간 선포식이 진행된 조계사 일주문 앞 자성과 쇄신결사 1000일 정진단. 정확하게는 4월 2일 오후 3시 10분의 1000일 정진단은 정진이 멈춰있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시간대에는 정진이 잡혀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실제 3월 한달 간 동참자를 살펴보면 1000일 정진 동참자는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출·재가 총무원, 일부 특정 사찰, 포교사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이마저도 대부분 재가자들의 동참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쇄신 주체인 스님들의 동참은 3월 동안 6명뿐이었다. 이들 스님은 총 10시간을 1000일

정진단에서 정진했고, 이중 5명은 중앙총무기관 국장급 스님이었다. 부실장 스님들의 동참은 전혀 없었다.

현재 정진 상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매일 12시간을 1000일간 이어가는 릴레이 기도’라는 홈페이지 설명이 무색하기만 하다. 또한 대중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총무원과 특정 사찰과 단체에게 의존하는 정진과 관련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계종 총재모임 삼화도량

(회장 영담)이 3월 31일과 4월 3일 각각 발표한 비판 성명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화도량은 성명서를 통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의 주요 불사인 ‘생명평화 1,000일 릴레이 정진’ 도량에는 기도 정진하는 이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면서 “조계종홈페이지에 마련된 1,000 릴레이 정진 신청 현황을 보면, 조계사, 불광사 신도, 포교사단, 중무기관 중무원이 번갈아가며 신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전시 행정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월 한달 동안 정진 현황을 보면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주지 스님이 지키지 않는 절에 신도가 모일 리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법 스님은 종도 앞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결사추진본부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반면, 1000일 정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결사추진본부는 4월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명했다.

추진본부는 입장문에서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일부 시간에 정진대중이 참여하지 못하고 정진단이 비워진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3개월 동안 정진 대중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진 대중의 동참률을 높이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는 “1000일 정진의 취지에 맞게 사부대중이 자발적이고 광범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22일 회향일까지 홍보와 조직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신성민 기자

봉행

전통명문 표암(알평) 문중 선지식 합동 다례재

전통 명문 표암(알평)공 문중 선지식 합동 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표암공 문중(경주, 차성, 합천, 평창, 가평, 아산, 재령, 우계, 진주, 원주 이씨) 沙門과 문중 선지식 木巖(向如)堂 體元禪師(고려말 해인사 주지),

惠和宮主 李氏 淨業院 主持(익재공 따님), 退翁堂 性徹禪師(전 조계종 종정), 春城堂 春城禪師(전 망월사 주지 무애대사),

伽山堂 智冠禪師(전 조계종 총무원장) 문도께서는 청풍계맥이 전승되고, 열이 線連하도록 두루두루 동참하옵길 앙망합니다.

- 아래 -

일시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00 (음력 3월 중정일)

장소 : 부산 태종사 (부산 영도구 동삼 2동 산 29-4) ☎ 051) 405-2626 (조실 도성 영공스님)

문의 : 010-6478-1569(현불)

표암(알평) 승가회장 흥산 현불